

광주·전남 태풍 영향 닭·오리 사육 마릿수 감소

광주·전남 지역에서 태풍의 영향으로 닭과 오리의 사육 마릿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와 돼지는 소폭 증가했다.

10월 8일 호남지방통계청이 '2012년 3·4분기(9월 1일 기준) 가축동향 조사' 결과 닭 사육 마릿수는 1천421만2천200마리로 전 분기(1천976만500마리)보다 28.1%, 전년 같은 기간(1천538만2천800마리)보다 7.6% 각각 감소했다.

또 오리 사육 마릿수는 528만6천700마리로 전 분기(544만9천마리)보다 3.0%, 지난해 같은 기간(548만6천마리)보다 3.6% 각각 줄어들었다.

이처럼 닭과 오리의 사육 마릿수가 많이 줄어든 것은 지난 8월 하순 2차례에 걸친 태풍으로 축사피해를 당한 농가에서 입식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육우는 53만6천900마리로 전 분기(53만3천200마리)보다 0.7%, 전년 같은 기간(53만6천400마리)보다 0.1% 등 소폭 증가했다.

돼지 사육 마릿수는 101만5천500마리로 어미돼지 재입식과 교체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산지가격 하락에도 명절을 전후해 가격 상승 기대심리로 전 분기(97만9천300마리)보다 3.7%, 전년 같은 기간(88만9천900마리)보다 14.1% 각각 증가했다.

이 밖에 젓소는 2만8천393마리로 큰 변동 폭은 없

이 전 분기(2만8천400마리)보다 0.02% 줄고 전년 같은 기간(2만8천300마리)보다 0.2% 늘어났다.

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2012. 10. 08

강원 '여름철 보양식' 오리·닭 사육 급증

강원지역에서 사육하는 가축 가운데 여름철 보양식 수요 증가에 힘입어 오리·육계의 마릿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9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3분기 강원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에서 사육되는 오리는 6만3천마리로 전 분기에 비해 56.9%(2만3천마리) 늘었다.

육계도 177만3천마리로 전 분기보다 22.2%(32만2천마리) 증가했다.

이는 보양식 수요증가에 따라 산지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돼지는 모돈수 회복 등에 힘입어 전 분기보다 9.1%(3만1천마리) 증가한 37만1천마리로 집계됐다.

구제역 이후 꾸준히 회복세를 이어온 젓소는 1만7천마리로 전 분기보다 4.6%(1천두) 증가했으며, 한·육우는 23만1천마리로 전 분기와 비슷한 사육 동향을 보였다.

반면에 산란계는 283만7천마리로 전 분기보다

6.2%(18만7천마리) 줄었다.
계란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농가들이 병아리 입식을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강은나래 기자 2012. 10. 09

서 “안전한 유기농 쌀 생산 및 도농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2012. 10. 10

초록마을, ‘홍성오리쌀’ 가을걷이 나눔의 축제 진행

초록마을은 지난 10월 6일 충남 홍성군 일원에서 ‘홍성오리쌀 가을걷이 나눔의 축제’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19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흥동면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쌀을 구입하는 초록마을 소비자 300여 명을 비롯해 지역주민과 농민 등 총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초록마을의 쌀 산지인 충남 홍성은 1993년 전국에서 최초로 오리를 이용한 ‘오리농법’으로 유기농 쌀을 매년 1,200여 톤을 생산해왔다.

오리농법은 오리가 벼를 먹지 않으면서 잡초를 먹고, 논을 헤집고 다니며 흙탕물을 만들어 잡초가 자라지 못하게 한다. 또한 오리의 배설물이 유기질 비료 역할을 하는 친환경 쌀 생산 방법이다.

이동훈 초록마을 양곡담당 MD는 “최근 한반도를 연이어 강타한 태풍으로 인해 시름이 깊어진 홍성 친환경작목회 생산자 분들의 어려운 환경을 이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도농상생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면

‘불황의 그늘’... 오리 생체값 6천원 붕괴

경기침체로 인해 축산물 가격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리도 예외 없이 불황의 그늘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한국오리협회(회장 이창호)에 따르면 지난 10월 8일 현재 생체오리 가격이 6천원대를 무너트린 5,900원을 기록했다. 연초 공급과잉에 따라 업계 자율적으로 입식을 줄이면서 여름철 성수기 수요로 반짝 상승세를 보였지만 8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선 오리가격은 9월에 들어서면서 6천원대마저 무너진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연초 업계 스스로 입식수수를 감축하면서 오리고기 공급량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급과 상관없이 오리고기 소비가 그 만큼 위축됐다는 지적이다. 지난 5월 사상 처음으로 월 도압량이 1천만수를 넘어선 이후 6월 808만수, 7월 769만수, 8월 719만수 등 공급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의 경우 오리 시세변화가 그 어느 해 보다 잦았다.

예년의 경우 오리시세가 연중 성수기와 비수기를 기점으로 시세 변화가 많지 않아 월 1회 정도 시세 변동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4월과 7월의 경우 한 달 동안 5~6회 정도의 시세가 변하는 등 올해 들어 총 20번이 넘게 시세가 변하고 있다.

이처럼 잦은 시세 변화는 그 만큼 오리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외적인 요인으로 경기 침체로 인한 육류소비 감소와 함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타 육류의 공급과잉까지 겹치면서 오리고기 소비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시기일수록 오리고기 소비와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전 오리업계가 하나로 뭉쳐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한국오리협회는 검정되지 않고 계통보증서가 없는 종오리의 사육을 중단할 것과 F1오리에서 생산된 새끼오리 입식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능력이 떨어지는 종오리는 조기에 도태시키고 시장 상황에 맞게 적정 수수를 입식해 줄 것과 오리고기 소비 둔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오리자조금 거출에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신문 이희영기자 2012. 10. 10

축산 밀어내기 일색 가축분뇨법...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환경부가 지난 5월 4일 이른바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무허가 축사 폐쇄 조치 등의 내용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반영,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축산업계는 규제일색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축산업계는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내놓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 ▲무허가 축사 폐쇄, 사용중지 명령 ▲방류수 수질기준을 현행 800mg/l 에서 250mg/l 로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축산을 하지 말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며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묵과할 수 없음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도 무허가 축사가 약 50% 수준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시 축산업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더군다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건축법 등 타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요인인 만큼 만약 이렇게 할 경우 축산업 기반자체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산업허가제, 가축사육시설 거리제한 등 규제강화에 축산업계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축산업계와 합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해 가축

분뇨법, 국토관리법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과 가설건축물 지붕 재질 확대라든가 닭·오리 축사 분뇨처리시설 면제, 가축분뇨 방류수 수질 정도 등에 대한 합동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관계부처 실무협의회를 통해 가축분뇨법 및 건축법 등 관련규정개정안을 마련, 지자체 조례 보완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건폐율 상향 조정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이달 중 관련 부처 설득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 달까지 축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칭 '무허가 축사 개선방안' 설명회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참여기반을 구축,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칭 '무허가 축사 개선방안'을 금년 내로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지원할 때 건축물대장 면적에 따라 지원하고 있어 무허가 축사에는 지원할 수 없다고 못박고, 그러나 무허가 축사를 이전하거나 적법화하기 위한 증·개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제한구역내 농가에서는 가능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축사 중 무허가 시설 철거 후 신규 축사를 증축할 경우, 불법 가설건축물 등을 개축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또 무허가 축사에 대한 폐업보상금 지원에 대해서는 곤란한 입장을 보이고, 무허가 축사 개선방안에 축산농가 스스로 문제를 시정할 수 있

도록 단계적,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충분한 유예기간과 정부지원을 병행하여 무허가 축사 유형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농식품부는 한마디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축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데 대해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농식품부와 협의를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홍문표 의원, 황영철 의원 등 국회에서는 축산업 현실을 도외시한 가축분뇨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대선을 앞두고 환경부가 당초 목적인 대로의 법 개정은 어려운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축산업계에서는 어쨌든 무허가 축사에 대한 해결책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한 길 밖에 없음을 거듭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선방안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2012. 10. 10

약용서 웰빙식품으로 국민적 관심... 가정소비 넓혀야

■ 시장에서 우리 축산물은 / 오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오리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는 중국, 프랑스 등 몇 개국에 불과하다. 특히 1인당 소비량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1년 사상 처음으로 국민 1인당 3kg을 넘어섰다.

■ 오리고기 얼마나 먹고 있나

1994년 350g에 불과했던 오리고기 소비량이 20년도 안돼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오리고기 소비량을 살펴보면 2000년대 초 1kg를 넘어서기도 했지만 2003년 HPAI발생 이후 720g까지 감소했던 오리고기 소비량은 이후 급격히 증가해 드디어 지난해 3kg을 넘어선 것이다.

반면 축산물 중에 가장 먼저 완전수입개방된 오리고기는 한때 수입산이 25%를 넘어서기도 했다. 1992년 완전수입개방된 오리는 중국산 오리고기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1996년 사상 최대인 8천427톤이 수입됐으며 1997년에는 7천231톤, 1998년 2천40톤, 1999년 2천13톤, 2000년 3천969톤이 수입됐다. 하지만 1997년 중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줄어들기 시작한 오리고기 수입량은 지난해 1천톤 정도로 국내 생산량 16만9천톤에 비해 국내 오리고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 오리고기 언제부터 먹었나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부터 오리고기를 먹었을까? 과거 오리고기는 식용보다는 대부분 약용으로 이용해 왔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불기 시작한 웰빙바람이 불면서 다른 육류와 달리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오리고기가 웰빙 식품으로 각광을 받으며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오리고기 소비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러한 영향을 받아 대형 오리전문점들과 프랜차이즈 업체가 등장하면서 오리고기 소비를 뒷받침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03년 이후 4번에 걸쳐 HPAI가 발생되면서 이러한 오리고기 소비를 급감시키면서 대형오리전문점들이나 프랜차이즈 점들이 폐업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면서 급격한 소비기반 붕괴로 이어져 불황을 겪어야만 했다.

그렇지만 2000년대 후반기에는 오리고기 소비는 이러한 대형 오리전문점들이나 전문 프랜차이즈 점들을 대신해 일반음식점에서도 오리메뉴가 일반화 됐다.

예를 들어 삼겹살 전문점에 오리고기가 등장하는가 하면 오리고기 전문점에서 삼겹살 다른 메뉴를 판매하는 형태로 변화됐다는 점이다.

때문에 과거 특별한날 특별한 곳을 가야만 오리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소비자들은 이제 시내 어느 곳에서도 손쉽게 오리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이 일반 식당에서도 오리고기를 쉽게 취급할 수 있게 된 것은 훈제오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주목할 만 한 점은 훈제오리 시장이 가장 크게 성장한 것이 오리 소비를 늘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오리메뉴를 취급하는 식당들이 늘어난 것과 함께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일부 대형마트에서 냉동 오리고기를 소량으로 취급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대형유통매장을 통한 판매기반이 크게 늘어났다.

요즘 시중의 대형유통매장을 가면 오리판매대가 한 코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오리전문점에서만 오리고기를 소비했던 소비자들이 가정에서도 손쉽게 오리고기를 요리해 먹을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TV홈쇼핑을 통한 판매도 오리고기 소비

를 늘리는데 한몫했다는 평가다.

2009년 한 오리업체가 TV홈쇼핑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하며 개척한 TV홈쇼핑 시장이 이제 웬만한 오리업체들의 한 판매수단으로 자리 매김 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오리고기 소비가 늘어난 것은 뛰어난 해독력과 성인병 예방 등 건강식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리는 독성이 강한 유허을 먹어도 해독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방에서 유허오리를 건강식으로 많이 추천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리고기는 수용성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70%에 달해 피부노화 및 비만을 예방하고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각종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 오리 산업의 현 주소는

이처럼 오리고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오리산업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다.

1990년 375억원에 불과했던 오리 생산액은 2010년 1조3천억원으로 성장했으며 이는 전체 농축산물 중에서 당당히 7위에 올라서기도 했다.

또한 오리농가들 역시 1990년 1만4천호가 넘었던 것이 2010년에는 5천가구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나 농가당 사육마리수는 81수에서 2천808수로 증가하는 등 규모화, 전업화가 이뤄졌다.

외형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해 왔다.

2012년 현재 HACCP인증을 획득한 도압장은 전국에 14개소가 있으며 포장처리업체는 26개소, 식육가공업체는 24개소가 있다. 또 농장단위

HACCP 인증을 획득한 농가들도 60호에 달한다. 오리고기 소비가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더 많은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오리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국오리협회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산 오리고기에 대한 소비자 및 영양사 인식도 조사에서는 10명주 9명이 오리고기를 먹어본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직접 오리고기를 구매한 소비자는 53%에 불과했다.

이는 아직도 오리고기가 대중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식재료가 아니라는 반증이다. 오리고기를 먹어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리음식점에서 었고 가정소비는 12.5%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단체급식 부문도 오리업계가 개척해야 할 분야다. 소비생활연구원의 조사에서 500개 학교의 단체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들은 단체급식 식재료로 오리제품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61.6%였으며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38.4%나 됐다.

또한 오리고기를 먹어본 소비자들은 대체로 30대 이상(81%)과 고소득층이 많은데, 식습관이 어렸을 때 형성되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오리고기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오리고기의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오리고기는 아직도 개척해야 할 시장이 많다. 이들 시장만 제대로 개척하더라도 오리고기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 오리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오리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지만 여전히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한 것이 많다. 무엇보다 산업의 기반인 오리농가들의 열악한 사육기반 개선 문제는 가장 시급한 과제다.

국내 오리농가들의 70~80%가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설 건축물로 무허가 축사로 분류됨에 따라 가축분뇨법이 개정 될 경우 정부의 지원 사업에도 제외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최근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지역 설정 권고안이 제시되면서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이를 인용해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설치함에 따라 오리 축사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생산비 절감 방안도 시급히 마련돼 한다. 2011년 현재 오리 한 마리당 6천32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산비의 62%는 사료비로 3천738원이 소요되고 있어 오리 생산비에 있어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다음으로는 새끼오리 구입비다. 새끼오리 구입비는 1천360원으로 생산비의 22.5%를 차지하고 있다. 사료비와 새끼오리 구입비가 전체 생산비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국내 오리농가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사육형태나 축사형태 등에 따라 정밀한 사육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연구인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일반적인 사육프로그램만에 의존하고 있어 관행적인 사육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다 과학적인 정밀한 사양관리 매뉴얼 개발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2003년 최초 발생한 이후 오리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 주고 있는 HPAI의 재발 방지도 오리업계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2012. 10. 10

‘오리고기집 사업’ 고수익 미끼로 45억 가로채

서울 방배경찰서는 음식집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가정주부 등에게서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이모(53)씨를 구속하고 김모(7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월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서초구 서초동에 사무실을 차려 “오리고기 가맹점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고 속여 가정주부 등 300여명으로부터 469회에 걸쳐 모두 45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5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투자하면 1~6개월 뒤 투자원금을 돌려주고 월 16~20%의 이자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 개설한 음식점은 두 곳뿐이었으며 이마저도 한 곳은 폐업했다. 경기도 과천시에서 오리고기 음식점만 투자자를 유인하려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들을 과천의 오리고기 음식점으로 데려 가 밥을 사주며 자신들이 유

망한 사업을 계획하는 것처럼 속였다. 초기 투자자들이 낸 돈을 다음 투자자들에게 이자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2012. 10. 17

은 바쁜 와중에 법안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것에 의의가 있다”며 “협회별로 요구사항 및 어려운 점을 정리해 언제든지 얘기해주면 하위관련 법안과 지원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2012. 10. 17

토종가축 보존·육성, 법안 안정 정착 우선

토종닭, 토종오리, 토종꿀 등 우리나라 토종가축의 종자 보존과 산업화를 위해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한봉협회 임직원들은 지난 10월 15일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사무관들과 축산과학원 가금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종가축 법안마련에 따른 발전 방안’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축산법 내 ‘토종가축의 정의’와 ‘토종가축의 보존·육성’에 관한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의 중요성을 공감했다.

토종가축 보존·육성 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유성엽 의원이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내년 2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와 관련해 협회별로 요구사항을 농식품부에 전달할 뜻을 밝혔다.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서재호 사무관은 “이번 모임

강진서 공사장 절개지 붕괴 3명 사망

전남 강진에서 공사장 절개지가 붕괴돼 작업 중이던 인부와 오리농장 주인 등 4명이 매몰돼 3명이 숨졌다. 10월 17일 오후 4시46분께 전남 강진군 작천면 갈동리 모 오리농장 인근의 야산 절개지가 붕괴되면서 오리농장 주인 이모(37)씨와 이씨의 처남 송모(41)씨, 인부 김모(60)씨, 관리인 김모(58)씨 등 4명이 매몰됐다. 사고 직후 오리농장 관리인 김씨가 토사에서 빠져 나와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와 경찰은 중장비를 동원해 구조작업을 벌였으나 이날 오후 6시30분께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현장에서는 굴착기 기사 2명과 관리인 1명, 사망자 3명 등 총 6명이 작업 중이었다. 이씨 등은 이날 10m 높이의 절개지 밑에서 위에 있는 오리농장의 우수관 설치를 위해 굴착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무너져 내려 매몰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스 맹대환 기자 2012. 10. 17

축산계열화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축산계열화법의 하위법령 제정 작업이 마무리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월 11일자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올해 2월 법률이 공포된 지 8개월여 만이다. 오는 11월 20일까지 관련업계 및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계열화사업자와 계열농가 간에 가장 민감한 부분인 원자재 품질 문제, 사육시설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향후 농식품부 장관고시에 담길 계획으로 양 측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반영될지가 주목된다.

시행령 안에는 △계열화사업자가 사육경비를 기일이 지난 후 지급할 경우 가산 이자의 이율을 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이율(연6%)로 정하고 △이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권고를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해 시정명령을 하도록 했다. 또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했다.

시행규칙 안에는 △이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계열화사업자의 규모를 정하고 △수급조절 절차 및 운용 방법 △계약서 작성 문제 △계열화사업자와 계열농가의 준수 사항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법 적용 대상의 계열화사업자의 규모는 돼지 5000마리 이상, 육계 33만마리 이상, 토종닭 12만마리 이상, 산란계 6만마리 이상, 오리 15만마리 이상, 염소 1200마리 이상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 장관이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 등에 생산 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들을 정했다. 또 계열화사업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할 경우 포함돼야 할 항목 △사육시설의 환기시설, 급수시설 등에 관한 사항 △방역시설의 설치기준 또는 방역 방법에 관한 사항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관한 사항 등도 추가로 정했다.

아울러 계열화사업자와 계열농가의 준수사항도 추가로 정했다. 계열화사업자가 계열농가의 출하가축 수령을 거부, 사육경비를 감액 및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과 계열화사업자 및 계열농가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이다.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도 정했다. 위원은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발전기금 또는 자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올해 축산계열화법 공포 이후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법에 포함될 주요 내용들을 정했다. 하지만 민감한 부분인 원자재 품질 문제 및 사육시설, 수급조절 부분 등의 세부 내용은 농식품부 장관고시에 담길 예정으로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 축산단체의 관계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됐지만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부분은 장관고시를 통해 정해질 것”이라며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가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12. 10. 22

전혜빈 오리 사냥 성공 “여전사 포스 물씬”

전혜빈 오리 사냥 성공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0월 21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일요일이 좋다-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in 마다가스카르'에서는 병만족 멤버들이 야생오리를 잡기 위해서 정글을 뒤흔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 전혜빈은 물에서 나온 오리를 놀려서 잡았다. 오리 맨손 사냥에 성공한 전혜빈은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내가 오리를 잡았다는 게 너무 신기했다”며 오리 사냥 성공 소감을 전했다. 곧이어 병만 족장도 지지 않았다. 김병만은 새총을 발사해 정확히 오리의 머리를 맞췄다. 결국 생존팀 4명은 야생오리 2마리를 정글에서 잡아 '대나무 오리탕'을 만들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천지일보 박해옥 기자 2012. 10. 22

오리 향후 산업 전망, 공급 감소 불구 타 육류 가격하락 영향 소비 부진

오리업계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오리협회에서 조사하는 시세가 있지만 의미가 없을 정도다. 시중에서는 생산비 7천원선에도 훨씬 못 미치는 덤핑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시세의 의미도 없어져 버렸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5천원대 제품도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풍문이다.

이처럼 오리고기 가격이 급락한 것은 무엇보다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이다. 공급량의 경우 연초 업계 자율적으로 사육량을 줄이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월 사상 처음으로 월 도압량이 1천만수를 넘어선 이후 6월 808만수, 7월 769만수, 8월 719만수 등 공급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리고기와 경합관계에 있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타 육류의 가격하락과 공급량 증가도 오리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리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가 고가에 형성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리고기로 소비가 대체됐지만 올해는 전혀 다르다”라며 “쇠고기 할인행사, 돼지고기 가격폭락 등으로 인해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오리고기 소비가 타 육류로 대체되면서 오리가격 하락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오리업계는 “모든 정책이 쇠고기, 돼지고기에 집중되고 있다며 오리 산업에 대해서도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내년도 오리업계는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2012. 10. 24